▌주요 내용 ▐

Ⅰ. 당면 문제와 그 원인

1. 당면 문제

- 경기 급락 가능성 조짐
  -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각종 실물 지표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 특히 금융 불안감에 따른 신용 경색 가능성과 실물 경제의 위축,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이 경기 하강을 앞당기는 요인들로 작용함
-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불안 심리 확대
  - **(금융 시장의 불안정과 기업 금융 마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미흡 혹은 오류 등으로 인해 금융 경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기업 금융 중개 기능의 마비로 자칫 경제 전체의 위기 혹은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정책 신뢰도 저하)** 정책 조정 메커니즘이 결여되었고, 근원적·사전적 처방보다는 대증요법적 처방에 급급하여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불안 심리 확대)** 금융시장의 불안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불안 등에 따른 연쇄부도의 위험, 낙관하기 어려운 주식시장 동향, 정보통신/벤처 위기론 대두 등에 따라 경제 불안 심리가 확대됨
- 성장 잠재력 기반 확충 미흡
  -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미흡)** 구조조정이 경영의 합리화 및 선진화, 기업 내 기술 및 지적 능력 향상 등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아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 **(산업 구조 재편 미흡)** 국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미흡하고 미래 유망 산업의 국내 기반이 매우 취약함

2. 문제의 원인

- 구조적 원인
  - **(경제 시스템의 재구축 미흡)** 경제 각 부문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제 시스템을 대체할만한 안정적 경제 시스템(예: 새로운 경제 환경에 어울리는 정부-금융-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 관계 등)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 **(새로운 성장 경로 모색 지연)** 과거 성장 경로의 급속한 파괴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정적 성장 경로가 모색되지 못함
· **(비효율적 사회 시스템)** 가치관의 혼란,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제 논리의 왜곡 등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성 여전

- 직접적 원인
· **(거시경제적 요인)** 건설투자의 부진, 소득 및 소비의 불균형 심화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불안정 요인이 여전함
·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의 불협화음)**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 자금의 주요 공급처인 은행과 투신에 대한 금융 구조조정 정책이 일관성없게 진행되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기능 제한 → 기업 금융경색 → 기업 부실 심화 및 부도 → 금융기관 부실 → 자금 경색" 등과 같은 악순환이 발생함.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및 기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됨
· **(금융 구조조정상의 오류)** 금융권의 부실자산 정리가 선행되지 않고 구조조정이 강행된 결과, 신용 및 유동성 위기 등 금융경색이 발생함
· **(경제 정책상의 오류)** 공공부문, 특히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정책의 비일관성이나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짐

II. 새 경제 팀의 정책 목표와 제약조건

1. 새 경제 팀의 위상과 역할

- 새 경제 팀은 기존 개혁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현안 문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함
·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역할보다는 당면한 현안을 조기에 완료하고,
· 중장기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 새 경제 팀에게 주어진 역할
· 거시경제는 물론 금융시장,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고,
· 특히 개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알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임

2. 정책 목표와 전략

- 정책 목표: 안정 속의 개혁과 남북 경협 활성화
  -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거시 경제의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함
  - 이러한 바탕 위에서 4대 부문의 경제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남북 경협 활성화도 주요 정책 목표임
- 전략
  - 거시 경제의 안정화
  - 정책 신뢰도 회복
  - 사회 통합력 제고
  - 금융 구조조정의 조기 완수를 통한 자금 경색 해소
  - 기업 및 공공 부문 구조조정의 가속화
  - 성장 잠재력 기반 확충 산업구조 재편의 가속화
  - 민간 주도 및 민관협력의 남북 경협 활성화

3. 제약조건

- 외생적 제약조건
  -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기 둔화, 고유가, 국제적 고금리 등을
  - 대내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 수입 유발형 수출구조 등을 들 수 있음
- 내생적 제약조건
  - 경제주체간 이해관계의 불일치 및 그 조정 메커니즘의 결여
  -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 악순환 고리
  - 공적 자금 조성과 재정적자 축소
  - 대외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유지의 어려움
  - 거시 정책 목표간 상충에 따른 정책 수단의 제한
  - 산업구조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미흡
  - 민간 주도 및 민관협력의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규제 지속, 인프라 미비, 자금조달 애로 등

III. 주요 정책 과제

당면 목표	당면 과제	주요 내용	주무 부처
거시 경제의 안정화	저금리 정책 지속	-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	재정경제부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 환율 및 기타 가격 변수 안정화	
	경제의 연착륙 유도	- 재정정책의 활용도 제고	
	안정적 거시 정책 운용	- 관리지표의 우선순위: 저금리기조 유지 → 경상수지 흑자 확대→ 안정성장 → 저물가 유지	
정책 신뢰도 제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 및 조화성 확보	- 경제정책의 결정 및 집행 시스템의 보완 - 관료주의 타파	모든 경제 부처
	시장친화적 정책 운영	- 정부의 경제 개입 원칙 확립 - 정책 피드백 기능 강화	
사회 통합력 제고	노사관계 현안 문제의 원만 해결	- 사회적 합의 유도	노동부
	제도 개선 문제 합의 및 마무리	- 정책 시행의 효율성 제고	
	금융 구조조정 관련 갈등 해소	- 구조조정 부작용의 사전적 방어	
	생산적 복지정책 재정립	- 소득분배 정책 증강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이해 조정 메커니즘 구축	- 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 문제의 해소 - 지역별,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운용 등	
금융 구조조정 완수	구조조정 정책의 우선 순위 및 추진 방향 설정	- 대우 관련 부채 해소등을 통한 금융권 부실 정리 - 은행에 의한 기업 개선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 조정의 善循環 구조 구축	- 금융권 부실 청산 메커니즘 재구축 -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를 통한 증권시장 선진화	
	기업금융 경색의 최소화	- 은행구조조정시 기업 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당면 목표	당면 과제	주요 내용	주무 부처
기업 및 공공 부문 구조조정 가속화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 장치 마련	- 기존 제도의 효과적 운용 - 기업간 전략적 제휴, 분사, 아웃소싱 등 전략적 사업 재구축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속 정비	공정거래위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조속한 공기업 민영화	- 경쟁체제 확보 방안 마련 - 고용승계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예산회계제도 개혁	- 조세지출예산제도 마련	
	공공부문 개혁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	-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지방자치제 대책 마련	- 기능 재조정 및 조세 제도 개선	
	전자·지식정부로의 이행	- 지식관리 시스템 마련	
성장 잠재력 강화	산업기술 기반 강화	- 국가적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 기술 시장 형성을 통한 기술 확산 및 사업화 촉진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산업의 적극 육성	- 부품·소재 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 유도	
	벤처기업의 육성	- 벤처 기업의 장기적 성장 기반 확충	
	에너지 저소비형·환경 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을 통한 소비 합리화 유도 - 산업 정보화 및 소프트화 추진	
남북 경협 활성화	제도적 장치의 남북간 조속한 합의	- 투자보장협정, 분쟁조정협정 등	통일부
	남북한 육로 연결 사업 조기 완료	- 북한 철도 운행 시스템의 지원 - 남북한 표준화·공동화	
	적정 수준의 대북 지원 자금 확보	- 기존 기금 활용, 신규 기금 마련 등	
	관련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북한 관련법의 포괄적 재검토, 개정	
	민관 합동 대북 사업단 설립	- 민간과 정부의 효율적 협의 기구 마련	

한국 경제의 당면 문제와 주요 정책 과제

Ⅰ. 당면 문제와 그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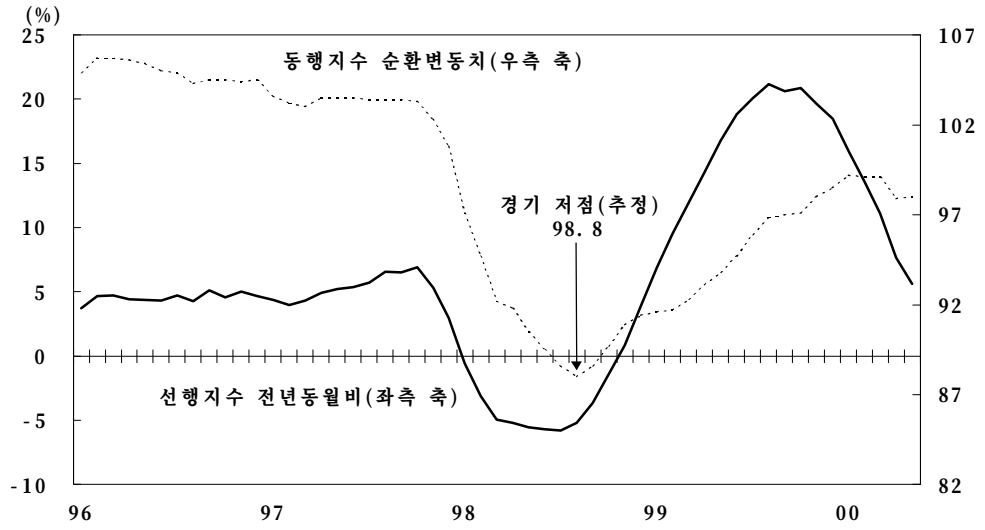
1. 당면 문제

① 경기 급락 가능성

○ 거시 경제 동향

- 경기 선행 지수 증가율의 하락
  · 경기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99년 11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어, 경기 하강이 임박했음을 예고함

<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감률 추이 >



- 상반기 거시 경제 지표 추이
  · **(생산 증가세 둔화)** 산업생산 증가율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됨

· **(소비 둔화)** 대표적인 소비 동향 관련 지표인 도소매판매액 증가율이 올 들어 계속 둔화되고 있음
· **(설비투자 호조)** 1/4분기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63.6%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기계수주, 기계류 수입액, 기계류 내수 출하 등 관련 지표들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건설투자 위축 지속)** 99년 2/4분기 이후의 국내건설수주 증가세 반전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1/4분기 중 7.0%의 감소세를 보임
· **(물가 상승 압력)** 국제 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
· **(수출 호조, 수입 급증)** 수출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압도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

○ 향후 거시 경제 전망

- 경기 급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과거 경기 순환의 확장 국면이 평균 34개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정점은 2001년 4월 정도로 예상될 수 있음
· 하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각종 실물 지표들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경기의 조기 하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대함
· 금융 불안감에 따른 신용 경색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실물 경제의 급격한 위축,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증가,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이 경기 하강을 앞당기는 요인들로 지적될 수 있음

- 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주요 내구재 수요가 포화 상태에 달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미루어 두었던 이른바 이연(移延) 소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하반기 이후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설비투자)** 99년의 급격한 회복세에 따른 반작용과 경기 하강 국면 진입에 따른 둔화,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등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 회복 지연**
  - 최근 국내 건설 수주는 절대 규모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초의 60%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회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투자는 2000년 하반기에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은 2001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수출 증가세 미미**
  - 일본, 유럽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외국인 직간접 투자 자금의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출 환경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제 원유가의 상승이 가격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②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불안 심리 확대

○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 금융 마비

- **만성적 금융 경색 반복 가능성 대두**
  - **(증권시장의 수급 불균형 및 低주가 부담 상존)** 97-99년에 걸친 기업 부문의 대대적인 채권 발행 및 유상증자로 인해 2001년까지 채권 대량 만기 도래와 개별 기업의 낮은 주당 수익률 등이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임
  - **(BIS 비율 8%의 엄격 적용 영향)** 은행 입장에서 안전한 국공채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뿐, 회사채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에 따라 은행 합병 논의가 더욱 거세질 것에 대비하여 합병시 평가 기준인 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은행들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음
  - **(정책 운용의 불확실성 상존)** 금융업계에서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더 근본적으로 제반 제도들의 규정들이 개괄적이어서 규정의 해석에서 다른 견해가 나올 소지가 큼을 지적하고 있음

- **기업금융 중개 기능의 마비**
  - IMF 위기 이후 1차년도에는 정부 차입(공적 자금), 사채 발행(기업 부채)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2차년도에는 정부보유 자산(공공 자금), 주식 발행(기업 증자)에 의해 구조조정이 유지되었음
  - 2000년에는 종전의 '정부주도(관치금융)-은행 자금줄 역할' 대신에 예정된 예금자 보호제의 부분 보장, 시가평가제 전면 실시를 통하여 새롭게 '시장자율-자본시장의 정보유통 역할'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나, 자본시장이 마비 상태에 있음

-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혹은 장기 침체 가능성 대두**
  - **(금융-기업 부문의 연결 고리 단절 우려)** 새로운 기업금융 중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나, 금융권은 건전성 위협에 머물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새로운 금융중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기업금융 부문의 활성화 가능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실정임
  - **(실물 부문의 침체 가능성)** 일부 초우량 기업군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들의 단기적인 실물 거래상 금융중개 이외에 장기성 투자 재원 마련이 계속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沮喪되고 있음

○ 노사 분규 가능성

- **노동계의 요구 본격화 가능성**
  - 임금 삭감 및 억제 보전, 금융 및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 다시 이슈가 될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 요구 등임

- **노사 분규 확대 가능성과 경제 불안정 심화**
  - 개별 기업의 임·단협 교섭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사 갈등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노사관계의 불안은 향후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화 자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 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회복 의문

- 경제 정책 조정 기능 미흡

· IMF 경제 위기 이후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 제시가 미흡하였음

· 새 경제 팀의 정책 조정 메커니즘은 아직 검증받지 않은 상태임

-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도 상실

· 대우사태 이후의 금융시장 마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관치행정에 의존한 대증요법적 정책으로 인해 은행권의 책임경영체제 실종, 은행 합병 위협에 의한 금융중개 역할 방기 등기 나타남

· 공적 자금 조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의 향후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음

-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외환위기 이후 발전적으로 정립되었던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개입의 최소"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못함

· 금융노조의 파업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의 공언이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임

- 정책 효과의 半減과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인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움

· 이는 각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유도하게 되어,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어렵게 함

○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 확대

- 금융시장의 불안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불안 등으로 연쇄부도의 위험, 주식시장 침체, 정보통신/벤처 위기론 대두 등에 따른 불안심리 확대

-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실물 부문의 침체를 야기하여 외환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③ 성장 잠재력 기반 확충 미흡

○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미흡

-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경쟁력 요인 소홀

·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각종 부실 요인을 제거하고 부적절한 제도들을 정비하는 등 기업 경영의 유형적, 하드웨어적 틀을 변모시키는 데 그침

· 경영 혁신, 기업 내 기술 및 지적 능력 향상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창출하여 중장기적 성장 원천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함

- 경영의 합리화 및 선진화 미흡

·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 체제를 도입하고, 조직, 재무, 정보화 등 경영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루어야 함

· 그렇지만 재무구조 개선 외에는 특기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산업구조 재편 미흡

- 국내 산업의 지식집약화 미흡

· 지식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산업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미래 유망 산업 분야 취약

· 21세기에는 정보통신 기술 혁신, 노령화 현상 심화와 생명 공학 발달, 환경 의식 제고, 대체 에너지 개발 등으로 정보, 생명, 환경, 에너지 분야가 급속히 성장할 새로운 성장 유망 산업임

· 그렇지만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분야의 국내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2. 문제의 원인

○ 구조적 원인

- 경제 시스템의 재구축 미흡

· 경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안정적 경제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 예컨대 금융기관-기업-정부의 3자 관계에 있어, 과거와 같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기능, 정부의 축적 지원 기능 등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구축은 매우 미흡함

· 또한 노사관계 역시 과거의 대립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 등 소아병적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음

- 새로운 성장 경로의 모색이 지연되고 있음

· 과거의 성장 경로가 급속히 파괴된 반면, 새로운 안정적 성장 경로가 쉽게 모색되지 못하고 있음

· 산업 구조의 질적 개편이 미흡하여 경제의 대외 의존성이 여전하며, 따라서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성

·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깃들지 못함

· 정치 등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 원리를 왜곡하는 등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여전함

○ 직접적 원인

- 거시 경제적 원인

· 건설투자의 부진, 소득 및 소비의 불균형 심화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불안정 요인이 여전함

·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국내 물가 상승, 기업 비용 부담 증가, 경상수지 악화 등 많은 부담을 줄 것임

-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의 불협화음**
  -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 자금의 주요 공급처인 은행과 투신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기능 제한 → 기업 금융 경색 → 기업 부실 심화 및 부도 → 금융기관 부실 → 자금 경색의 악순환을 낳은 遠因으로 작용함

- **금융구조조정상의 오류: 일정 및 추진 방법의 문제**
  - **(구조조정 우선 순위의 혼란)** 금융권의 부실 자산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나,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만을 강조하면서 신용 및 유동성 위기 등 금융경색이 과도하게 발생
  - **(BIS 비율과 은행간 합병 압력 상존)** 은행들의 기업대출 유인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금융시장에서 기업부실과 관련된 악성루머가 횡행하는 점도 이러한 운영 행태의 한 원인임
  - **(종금사 정리의 무원칙성)** 자금시장 경색 우려로 인해 한국종금의 하나은행을 통한 지원 사례로 인해 시장자율의 정리 원칙이 무너졌음
  - **(추가 공적 자금 조성에 대한 불투명성)** 대우채 관련 연계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공적 자금 추가투입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킴
  - **(워크아웃 제도 개선에 있어 신중성 결여)** 워크아웃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퇴출 기업을 결정하고 일시에 발표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CRV와 같은 代案이 발휘되기 전에 퇴출 예고를 먼저 함으로써 채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운용 행태와 불안 심리를 더욱 조장함

- **경제 정책상의 오류**
  - 공공 부문, 특히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정책의 비일관성이나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짐
  - 또한 정책 당국은 단기적인 성과를 가시화시키는 데 주력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펀더멘털 구축이 미흡함

Ⅱ. 새 경제 팀의 정책 목표와 제약조건

1. 새 경제 팀의 위상과 역할

- **개혁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현안 문제의 조기 수습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함**
  -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선도자 역할보다는, 기존 정책을 이어받아 정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
  - 당면 현안 문제를 우선 조기에 완료하고, 중장기적 과제, 특히 경제구조의 선진화 과제는 차기 경제 팀 혹은 차기 정부에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사고가 필요

- **새 경제 팀에게 주어진 역할**
  - 경기 급락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금융시장(자금, 증시, 외환 등) 안정, 사회·경제적인 안정화를 최우선 당면과제로 추진
  - 개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알력을 슬기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특히 정책 신뢰도 저하의 주요 원인인 정책 부처간 불협화음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2. 정책 목표와 전략

○ 정책 목표: 안정 속의 개혁과 남북 경협 활성화

-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거시 경제의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함
  - 이러한 바탕 위에서 4대 부문의 경제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외에 남북 경협 활성화도 하반기 주요 정책 목표임**

○ 당면 목표의 달성 전략

- 거시 경제의 안정화
- 정책 신뢰도 회복
- 사회 통합력 제고
- 금융 구조조정의 조기 완수를 통한 자금 경색 해소
- 기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가속화
- 민간 주도 및 민관협력의 남북경협 활성화

3. 제약조건

○ 외생적 제약조건

- 대외적인 면
  · **(미국 경기 둔화)**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기 하강 국면 진입에 따라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 OPEC의 감산 정책에 따라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는 물론 경상수지 악화를 재촉할 것으로 우려됨
  · **(국제적 고금리)** 99년초 5%대 초반에 불과하던 LIBOR가 최근 6.8%대로 상승하는 등 국제적 고금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대내적인 면
  · **(물가 상승 압력)**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수입 유발형 수출 구조)** 원자재와 주요 부품 및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수

입 유발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수출이 증가하거나 경제가 성장하면 수입도 덩달아 증가하게 됨. 특히 최근 설비투자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 증가가 국내 생산 증가보다는 수입 증가를 유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내생적 제약조건

- 경제주체간 이해관계의 불일치 및 조정 메커니즘의 결여

-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정부는 정책 혼선, 미래에 대한 청사진 부재 등으로 효율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했음
- 노사정위원회도 민주노총의 탈퇴 등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 악순환 고리

- 구조조정 대상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시화된 부실을 정리하는 데 급급하여 금융권과 기업의 好循環 메커니즘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한 금융권의 보신주의적 경향은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함

- 공적 자금 조성과 재정적자

-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및 구조조정 지원에 있어서의 공적자금 투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재정적자의 축소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여유 재원 활용이 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개혁은 뒤로 미룬 채, 여타 부문의 재정지출 축소만을 고수하고 있음
- 정부의 이같은 균형재정 목표 달성 노력은 향후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대외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상 흑자 유지의 어려움

- 국내 자본 시장의 개방화 진전에 따라 유입되는 외국인 직간접 투자 자금의

증가는 환율 하락을 유발하여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임

· 금융 경색이 단기간내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수출 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조달 자금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켜, 외환위기 직후 수출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수출에 많은 차질을 빚었던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음

- 거시 정책 목표간 상충에 따른 정책 수단의 제한

·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 유도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한 수출 경쟁력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그러나 환율 상승의 유도는 지속적인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이외에도 국내 물가 불안정을 유발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대외 채무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역효과도 가져오게 됨

· 총수요 억제 정책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유도는, 과열 경기를 누그러뜨림으로써 수입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경기 하강기에 사용될 경우 경기 침체의 골을 깊게 할 수도 있음

- 민간 주도 및 민관협력의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데 제약조건

· **(절차의 복잡성 및 규제 지속)** 북한 주민 접촉 승인, 남북한 선박 운행 승인, 대북 투자 관련 승인 등 규제 및 절차상의 복잡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실물 및 제도적 인프라 미비)** 물류비 과다로 인한 高비용, 대북 투자시의 위험 부담 등으로 인해 경협의 질적 변화가 힘든 형편임

· **(경협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상의 어려움)** 현재 우리 기업의 경우 금융 불안 속에서 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경협 필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업간 · 기업-정부간 협의체의 미비로 인한 공조 체제 미약)** 정보 공유 체계가 미비하며, 국내 기업 및 기업-정부간 협력이 지속되지 않음

III. 주요 정책 과제

당면 목표	당면 과제	주요 내용	주무 부처
거시 경제의 안정화	저금리 정책 지속	-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	재정경제부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 환율 및 기타 가격 변수 안정화	
	경제의 연착륙 유도	- 재정정책의 활용도 제고	
	안정적 거시 정책 운용	- 관리지표의 우선순위: 저금리기조 유지 → 경상수지 흑자 확대→ 안정성장 → 저물가 유지	
정책 신뢰도 제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 및 조화성 확보	- 경제정책의 결정 및 집행 시스템의 보완 - 관료주의 타파	모든 경제 부처
	시장친화적 정책 운영	- 정부의 경제 개입 원칙 확립 - 정책 피드백 기능 강화	
사회 통합력 제고	노사관계 현안 문제의 원만 해결	- 사회적 합의 유도	노동부
	제도 개선 문제 합의 및 마무리	- 정책 시행의 효율성 제고	
	금융 구조조정 관련 갈등 해소	- 구조조정 부작용의 사전적 방어	
	생산적 복지정책 재정립	- 소득분배 정책 증강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이해 조정 메커니즘 구축	- 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 문제의 해소 - 지역별,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운용 등	
금융 구조조정 완수	구조조정 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 방향 설정	- 대우 관련 부채 해소등을 통한 금융권 부실 정리 - 은행에 의한 기업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의 善循環 구조 구축	- 금융권 부실 청산 메커니즘 재구축 -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를 통한 증권시장 선진화	
	기업금융 경색의 최소화	- 은행구조조정시 기업 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당면 목표	당면 과제	주요 내용	주무 부처
기업 및 공공 부문 구조조정 가속화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 장치 마련	- 기존 제도의 효과적 운용 - 기업간 전략적 제휴, 분사, 아웃소싱 등 전략적 사업 재구축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속 정비	공정거래위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조속한 공기업 민영화	- 경쟁체제 확보 방안 마련 - 고용승계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예산회계제도 개혁	- 조세지출예산제도 마련	
	공공부문 개혁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	-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지방자치제 대책 마련	- 기능 재조정 및 조세 제도 개선	
	전자·지식정부로의 이행	- 지식관리 시스템 마련	
성장 잠재력 강화	산업기술 기반 강화	- 국가적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 기술 시장 형성을 통한 기술 확산 및 사업화 촉진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산업의 적극 육성	- 부품·소재 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 유도	
	벤처기업의 육성	- 벤처 기업의 장기적 성장 기반 확충	
	에너지 저소비형·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을 통한 소비 합리화 유도 - 산업 정보화 및 소프트화 추진	
남북 경협 활성화	제도적 장치의 남북간 조속한 합의	- 투자보장협정, 분쟁조정협정 등	통일부
	남북한 육로 연결 사업 조기 완료	- 북한 철도 운행 시스템의 지원 - 남북한 표준화·공동화	
	적정 수준의 대북 지원 자금 확보	- 기존 기금 활용, 신규 기금 마련 등	
	관련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북한 관련법의 포괄적 재검토, 개정	
	민관 합동 대북 사업단 설립	- 민간과 정부의 효율적 협의 기구 마련	

1. 거시 경제의 안정화

① 저금리 정책 지속

- **현재의 상황은 금융 불안과 경기 급락 가능성 대두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과 이에 따른 금융 불안 가중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 반면 국제 유가 강세에 따라 국내 물가도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님
- **따라서 향후 거시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는 금융 시장의 안정에 두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저금리 기조의 유지가 중요할 것임
  - 그 밖에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 안정적 성장 지속→ 저물가 유지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②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 **단기외채의 증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수지의 적자 반전 가능성 차단이 중요함**
- **이에 따라 환율의 안정성 제고와 금리, 물가, 임금, 지가 등 비용 요소들의 안정 등이 필요함**

③ 경제의 연착륙 유도

- **긴축 기조 전환은 경기를 급냉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적절함**
  -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성급한 긴축 기조로의 전환을 삼가고 안정적 완화 기조 유지
  - 특히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국과 같은 식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할 것임

·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은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여 단기 금리 인상에 의한 총수요 관리로 대응하는 경우 과도한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신축적 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정책의 활용도 제고

· 균형 재정을 무리하게 고수하기 보다는 중장기 재정 건전화 계획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경기상황에 맞춰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정책의 활용도 제고

④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 경제의 안정기조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적절한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을 운용하고 거시경제 정책상의 관리지표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

- 현재의 금융시장의 불안 및 기업의 신용경색 상황하에서 급격한 물가상승의 우려는 크지 않으므로 관리지표의 우선순위는 저금리기조 유지→경상수지 흑자 확대→안정성장→저물가 유지에 두어야 할 것임

- 금융시장의 신용불안 장기화로 인해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실물경제의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2. 정책 신뢰도 제고

① 경제정책의 일관성 · 조화성 확보

- 경제정책의 결정 및 집행 시스템의 보완

· **(경제장관회의)** 재경부 장관을 수장(부총리)으로 하는 경제장관회의 부활

· **(예산권과 정책결정권의 일원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예산편성권과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원화로 인해 권력 분산의 효과는 있으나, 정책 실행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스텝진과 정책집행부처 간의 역할 조화)** 대통령 스텝진과 실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관, 즉 부처들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관료주의 타파

· 경제 관료들의 부처이기주의적, 타성적 행태로 인해 정책의 부조화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가 상실되고 있으므로, 관료들의 자율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자율성 보장)** 성과를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의 하부 이양을 통한 관료조직 개선, 예산 절감 인센티브를 포함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등

· **(책임성 강화)** 유명무실한 정책 실명제의 철저한 실시와 감사 기능의 개선 필요. 국회의 행정 감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전문성 제고)** 개방형 임용제의 확대와 외부 전문가들이 부처에 투입될 경우 조직내 융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 예컨대 현행 고시제도를 좀더 세분화하여 임용단계에서부터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함

② 시장친화적 정책 운영

- 정부의 경제적 역할 및 경제 개입의 원칙 확립

· 정부의 경제 정책은 명백한 시장 실패에 대한 교정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맡겨야 함

· 지나친 시장 규제는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켜 시장참여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정책 피드백(feed back) 기능 강화

·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피드백(feed back)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정책부서의 권위와 체면 등을 이유로 실행중인 정책의 오류를 적기에 바로 잡지 못할 경우 정부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3. 사회 통합력 제고

① 노사관계 현안 문제의 원만한 해결

- 노동계의 對정부 집중 투쟁 국면의 해결이 가장 시급

· 당면 현안으로서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 파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반발한 농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

· 한편 지도부 단식 농성에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추가로 합류, 이후 집중투쟁에 대거 동참한다는 계획 하에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법과 질서의 준수라는 전제를 근저로 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신속히 도출하여야 함

- 전반적인 노사관계 안정화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합의의 틀 마련임

·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가 구조조정 계획 수립 및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또한 노사정위원회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와 노동부문 현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공감대 도출을 이루어내는 합의의 틀로서 기능하여야 함

② 다양한 제도 개선 문제들의 원활한 합의 및 마무리

- 근로시간 단축, 전임자 급여 지급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제도 개선 문제

·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이후에는 노동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노사 및 노정 갈등의 핵심 이슈로 될 것임

· 더욱이 금융 구조조정 관련 타협을 선례로, 이러한 제도 개선 요구는 더욱 강력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연내 입법추진'을 합의한 만큼 휴일·휴가제도 등 근로기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할 것임

· 이에 더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교섭창구 단일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논의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노사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책 시행의 효율성 제고

·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정책 시행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한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더불어 제도 자체를 바꾸는 정책은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개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

③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한 갈등 여지의 해소

- 금융노련의 총파업과 그 타결은, 총파업을 통한 정책 결정에의 참여라는 나쁜 선례를 만듦

· 금융노조와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정간의 극한 대결 양상은 일단 방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이 합의는 노조가 총파업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음

· 따라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불안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 고조될 경우, 총파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갈등과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고용 불안, 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발전적인 타협점 도출을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책임감있는 정책 대응을 함으로써 정부의 公言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함

④ 생산적 복지 정책의 재정립 및 적극적 추진

- 생산적 측면의 소득분배 정책 대폭 확충

· 복지 대책의 경우 시혜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자활을 유도하는 생산적인 내용이 主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비효율적인 복지 프로그램의 폐지나 전환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는 식으로 재정 부담을 축소시키는 노력도 중요함

- 생산적 복지 구현 대책의 적극적 시행

· 정책 우선순위로 인해 집권 전반기에는 공공근로,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시급한 사항의 추진 이외에는 추진 과제의 도출 및 계획 입안에 집중함으로써 계획 수립과 실천 방안의 제시는 무성한 반면,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임
· 따라서 직업훈련의 강화와 같은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부터 서둘러 시행하는 등 '생산적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

⑤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조정 메커니즘 확립

-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적 약자, 특히 빈곤층과 실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통해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함
· 즉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노사문제와 함께 풀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 과제임
· 따라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노사갈등 완화를 위한 재교육 대폭 확대, 재취업 기반 마련 등의 실업대책 방안이 노사문제의 연계선상에서 제시되어야 함

- 이해집단간 갈등의 효과적 조정 메커니즘 확립

· 정책 시행 이전에, 현재 형식적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공청회 등 사전 조정 메커니즘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한편 업종, 지역 차원의 사전적 노사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업종별 노사정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전반의 불균형 완화 및 계층간 위화감 해소 긴요

· 집권 전반기에는 경제·사회적인 위기 상황의 발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대량실업 해소, 저소득층 생계 지원에 대부분의 정책 역량을 집중

· 즉 계획상으로는 중장기 추진 과제들이 함께 수립, 제시되었으나, 실제 추진은 단기적인 실업 감소 대책에 집중해 나옴
· 따라서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보다 상대적 중요성을 갖는 분배문제, 즉 불균형 완화와 계층간 위화감 해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
· 또한 사회적 위화감의 근본은 소득분배 만이 아닌 富의 분배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빈부격차에 있으므로 불균형은 물론 불평등 해소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

4. 금융 구조조정 완수

① 구조조정 정책의 우선 순위 및 추진 방향 설정

- 구조조정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완급 조절
· 대우관련 부채의 해소를 둘러싼 금융권 부실 정리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금융권 → 기업 → 금융권 → … 등 구조조정의 순환 과정에 있어 쌍방간의 상충여지를 최소화하는 '완급 조절'이 요구됨

- 제 2 금융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
· 대량 부실의 정리 및 후속적인 금융기관의 청산을 핵심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우관련 부실 채권 처리를 둘러싼 금융기관간 분쟁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를 전제로 손실 분담의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

- 부실 기업의 워크아웃 개선 방향 설정
· 부실 워크아웃 기업은 조기 퇴출하되, 이번에 개선된 CRV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은행)-채무 기업-해외 투자가 등의 사전 이해와 조정 작업을 거친 후, 은행에 의한 워크아웃으로 대체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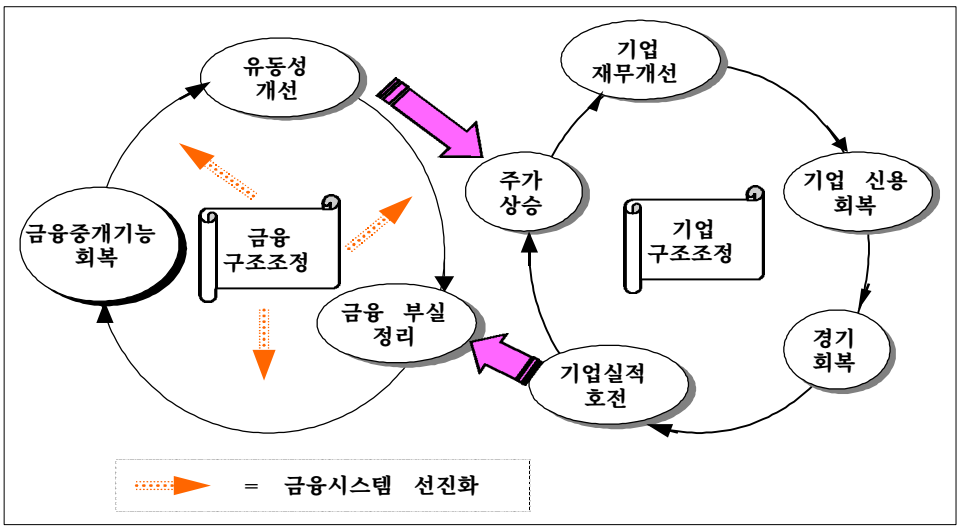
②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의 善순환 구조 구축

- 금융권 부실의 대대적인 청산 메커니즘 재구축

· 화의 ·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기업 구조조정 회사를 통한 기업회생 등 부실 기업의 정리 메커니즘을 유기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하며, 예금보험공사 · 자산관리공사를 공적 부실 정리 기구도 협력과 역할 분담 체계화도 요구됨

-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를 통한 증권시장 선진화

· 투신사,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최소 50% 이상)으로 상승토록 유도함



③ 기업 금융 경색의 최소화

- 은행 구조조정의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은행 구조조정의 과정에서도 기업 대출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프리미엄)를 은행에 제시해야 함

· 구조조정시 BIS 비율 기준만을 적용할 때 야기되는 금융경색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외에 기업대출에 따른 기여도 등 다른 요소도 감안

· BIS 비율이 높은 경우 역마진을 감내하는 은행의 현실을 발표하여 영업을 통한 건실화 유도 등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수익성이 높고 자산운용도 적절히 하는 은행이 좋은 은행이라는 인식의 전환 등 정부의 정책 유도가 필요함

<참고> BIS 자기자본 기준에 의한 규제가 갖는 문제점

① 포트폴리오 효과를 무시

- **BIS 기준은 각 자산간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반영시키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위험 분산 효과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 BIS 기준은 개별 자산의 위험량을 단순 가산하는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효과를 무시하고 있어 은행의 자산배분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채의 위험 비중은 0%이기 때문에 위험 합산 방식의 BIS 기준은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기타 채권 투자를 기피하고, 국채 선호도를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여타 공공채, 금융채, 사채 등과의 수익률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음
  - 위험 합산 방식은 적정 자기자본의 수준과 적정 자산배분을 왜곡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 효과를 감안하려는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본래의 적정 자산배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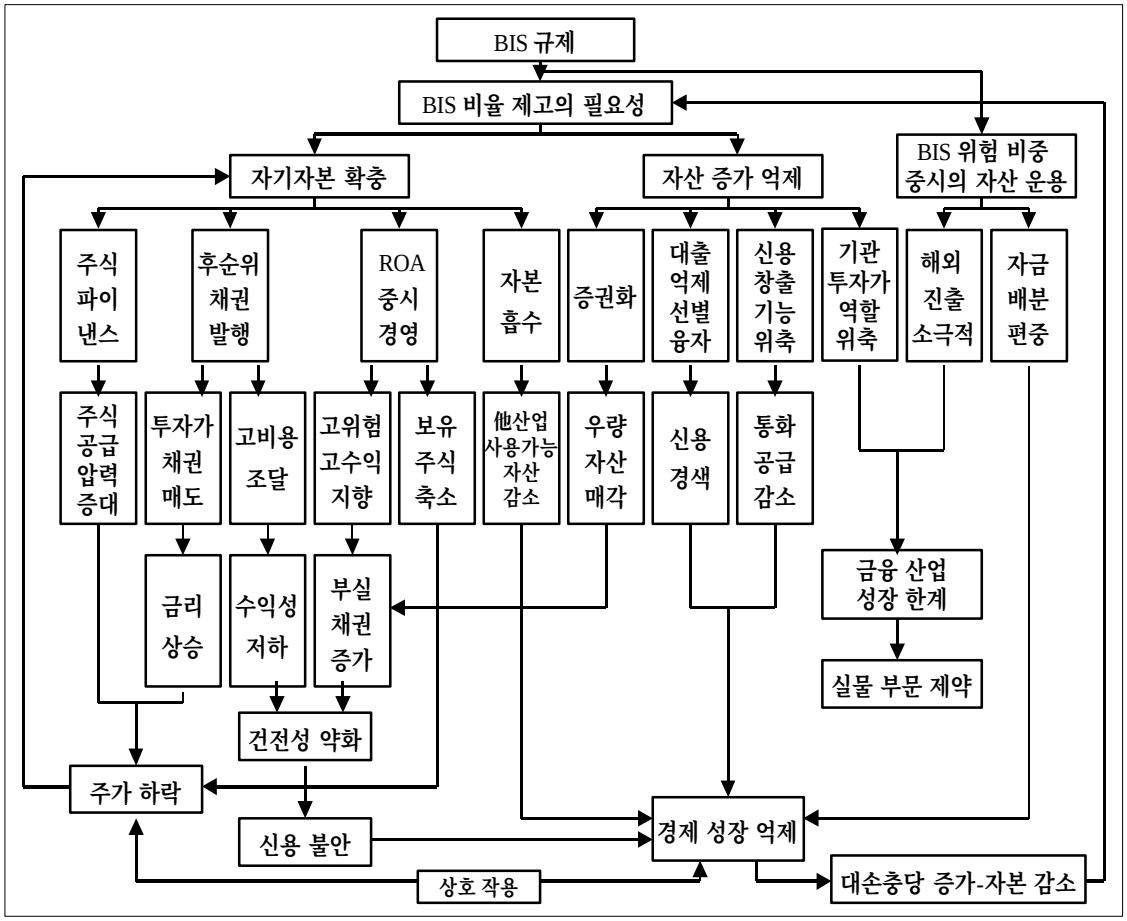
② 경제 성장의 억제 가능성

- **금융기관은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대출 등 자산 증가 속도를 일정 범위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③ 개별 은행의 규모와 성숙도 차이 未반영

- **은행이 보유해야 할 적정 자기자본의 규모는 그 은행의 발전 정도와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모든 은행에 일률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소규모 은행이 대규모 은행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음

< BIS 자기자본 규제의 도입에 따른 금융경제적 파급 영향 >



5. 기업 및 공공 부문 구조조정 가속화

① 효율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 **대규모 기업집단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주는 신규 정책은 자제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초점**
  - 현재 대그룹의 계열 분리를 비롯한 긴급한 구조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다른 압박 수단을 쓰는 경우,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음

· 단, 기업간 전략적 제휴, 분사, 아웃소싱 등 전략적 사업 재구축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함
· M&A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항상적 기업 구조조정 메커니즘 마련

② 조속한 공기업 민영화

- (현황)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공기업(포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기관장 인사에 있어 소위 '낙하산 인사"으로 인해 자율 책임경영 등의 발판을 저해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자체 총부채의 1/3이 넘어 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

- (과제) 당초의 민영화 일정에 따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함
·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두려워 할 경우, 민간 부문 구조조정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임
· 민영화의 목표인 경쟁체제 확보를 위해서는 일괄 입찰보다는 복수 사업자에게 분할 매각하고 입찰자의 경영능력 등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함
· 부실 공기업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매각수입이 적더라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일단 매각 자체에 성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용안정을 중시한다면, 고용승계 비율에 따라 인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③ 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 (현황) 예산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 조치들이 아직도 미흡함
· 현정부 출범당시 76개에 달하던 기금이 현재 55개로 축소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수준임
· 공공 기금과 더불어 22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제도로 인해 예산 운영의 불투명성은 여전함
· 조세지출(보조금 등)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여러 차례의 도입 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도입이 불분명

- **(과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
  -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정비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예산 총액 편성 대상사업의 확대를 통한 부처의 자율성 확보
  - 예산이월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예산 집행의 신축성 제고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한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습관적인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제재 제도 마련

④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

- **(현황) 재정건전화 계획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같은 장기적 건전화 계획이 결여되어 있음**
  - 문제점이 있는 공공 분야의 개혁은 미진한 채 재정의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오히려 필요한 부문의 재정지출이 감소될 위험이 있음

- **(과제)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제정과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그 실효성이 1년도 채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⑤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현황) 현정부 출범 당시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인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은 거의 실행된 것이 없음**
  - "지방조직 통폐합을 통한 인력감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자치단체의 과표 결정권 확대" 등은 주요 과제들이 실행되지 않음

- **(과제)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진단 실시 및 대책 마련

· 지방화 시대에 맞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조정
· 국세와 지방세 재조정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지방채 발행제도와 지방정부 기금제도의 개선
·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책 마련

⑥ 전자·지식정부로의 이행 기반 마련

- **(현황) 일부 부처에서 몇몇 서비스를 G2G(예: 예산업무 정보망), G2C(예: 제세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 G2B(예: 전자 구매·조달체제) 초기 단계로 사용 중임**
  · 또한 지식관리 시스템을 시험 도입 운영 중임

- **(과제)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지식을 체계적으로 생산·축적·활용하는 지식정부를 구현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지식·정보 공유 촉진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여 지식관리 시스템의 확대 활용 도모
  ·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 전자 구매 조달체계를 확대 운영하여 민간과의 정보화 격차를 축소시킴은 물론 나아가 정보화 선도 기능 확보

6. 성장 잠재력 기반 강화

① 산업기술 기반 강화

- **기술 혁신 성장 구조로의 이행**
  · 산업기술 기반 강화 정책은 요소 투입형 성장 구조에서 기술 혁신 주도의 성장 구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산업정책적 과제

- **국가적 기술 혁신 네트워크 체제 구축**
  · 産·官·學·硏 및 지역별 거점 등을 망라하는 기술 혁신 네트워크 체제 구축
  · 전사회적인 이노베이션 문화 정착으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 추구

- **기술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 및 기술 인력의 효율적 수급 체계 구축**
  · 핵심 기술의 전략적 개발과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술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현장 중심의 고급 기술인력 수급 관리

- **기술 시장 형성을 통한 기술 확산 및 사업화 촉진**

② 부품·소재 산업의 적극 육성

- **부품·소재 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 유도**
  · 부품·소재 업체의 대형화 유도로 기술개발력 제고 및 글로벌 소싱 대응력 확보
  · 부품·소재 부문에 대한 외자 유치 및 해외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적극 유도

- **조립 대기업과 부품·소재 업체간의 거래 관계 개선**
  · 전속적·수직적 거래 관계를 개방적·중층적 거래 관계로 변화 유도
  · 거래 방식의 e-비즈니스화 적극 추진

③ 벤처 기업의 육성

- **벤처 기업의 장기적 성장 기반 확충**
  · 벤처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위한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 메커니즘 구축
  · 벤처 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벤처기업의 세계화 및 지방화 촉진
  · 벤처 캐피탈, 벤처 기술, 벤처 인력 등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주력

④ 에너지 저소비형·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고유가 시대에 부응한 에너지·자원 정책의 추진**
  ·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을 통한 소비 합리화 유도
  · 대체 에너지 등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유도

- **환경친화형 경쟁력(Green Competitiveness) 제고**
  - 산업의 정보화 및 소프트화 추진
  - 중후장대형 산업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인 경박단소형 산업 구조로 점진적 전환

7. 민간 주도 및 민관 협력의 경협 활성화

① 투자보장협정 등 북한과의 제도적 장치 합의

- **남북한 교역·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 등 각종 제도적 협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
  -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등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남북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최근 제1차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 분쟁조정협정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 공동의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과 국제중재법원을 통한 국제적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 및 연락에 대한 보장 협정도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신변 안전, 자유로운 통행, 통신, 통상과 관련된 협정의 체결 등임

② 남북한 육로 연결 사업의 조기 완료

- **경의선 연결 사업이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철도 복구 사업이 필수적임**
  - 북한 철도 총연장의 98%가 단선이며, 철로, 차량 및 철도 시스템(신호 체계 등)의 노후화로 운행 속도 저하(시속 30~40 km 수준), 운행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있음

< 남북 철도 복구 비용 >

노선	총 길이	예상 복구 비용
경의선(서울~신의주)	500 km	2조 원
경원선(서울~원산)	210 km	8,400억 원

· 경의선, 경원선의 북한내 개보수 공사 및 복선화 사업에는 관련 국가(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다국간 컨소시엄 형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북한 철도 운행 시스템의 지원 및 남북한 표준화·공동화가 이루어져야 함

· 북한 철도 운행의 정보화(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통해 철도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남북한 철도 시스템의 표준화에 대한 상호 협의 및 합의가 도출되어야 장기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

- 경의선, 경원선 이외에도 기타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이 확충되어야 함

< 남북 연결 가능 철도망 >

철도선	미연결 구간(km)	추진 현황
경의선 (서울-신의주)	남측: 문산-장단(12.0) 북측: 장단-봉동(8.0)	- 실시 설계(1985년) - 임진강 교량 하부 보강(1986년) - 용지 매수(1997년)
경원선 (서울-원산)	남측: 신탄리-군사분계선(16.2) 북측: 군사분계선-평강(14.8)	- 실시 설계(1991년) - 용지 매입(1997년)
금강산선 (서울-금강산)	남측: 철원-군사분계선(24.5) 북측: 군사분계선-기성(50.8)	- 기본 및 실시 설계중(1998년)
동해북부선 (강릉-원산-나진)	강릉-북한 온정리간(130)	-

③ 적정 수준의 대북 지원 자금 확보

- **대북 지원 기금 확보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음**

- **첫째, 기존 기금의 활용**
  - 기존 기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이 있음
  - **남북협력기금:** 가장 활용성이 높은 기금이며, 최대 가용자원은 약 2,000억 원 정도임
  -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대북 지원 목적이 아니므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임

- **둘째, 새로운 기금(가칭 남북경협기금)의 조성**
  - 민관 합동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 출연금 및 기업의 기금이 주된 재원 조달 방식임
  - 통일 복권 등의 방식도 가능할 것임

- **셋째, 직접적 자금 조달**
  - 이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증세, 국공채(가칭 통일 채권) 발행 등 국민들로부터의 지금 조달 방식: 조세 역시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공채 발행 역시 재정적자의 우려가 있음
  - 국가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한 공적 자금 조달

④ 경협 관련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절차의 복잡성 및 규제 지속**
  - 지난 98년 4월 정부는 남북 경협 활성화 조처를 발표하여 對북한 경제 협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였음
  - 그러나 북한 주민 접촉 승인, 남북한 선박 운행 승인, 대북 투자 관련 승인 등 규제 및 절차상의 복잡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남한내 북한 관련 법의 포괄적 재검토 및 개정이 필요함

·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남북협력기금법,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법인세법 등 북한 관련 법규정 30여 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함

· 방북 절차, 남북한 선박 운행 승인 등 실무 차원의 각종 법규 개정을 통해 민간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음

⑤ 민관 합동 대북 사업단 설립

- 현재 민간 기업과 정부 간의 합리적·효율적 협의 기구가 없음

·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간의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효율적 접근에도 문제가 있었음

- 민관 합동 대북 사업단의 임무

· 대북 SOC 사업에 대한 효율적 진출 협의
· 정보 제공·공유 및 기업의 정보 수집 지원
· 업무상 애로 사항의 청취 및 對북한 건의·조정 협의
· 경협 장애 요인 제거 및 해결 방안 수렴

- 사업단 조직은 크게 2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정부 SOC 사업국:** 철도 복구 및 연결 사업, 북한내 도로 사업 등 민간이 추진하기 힘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사업 추진
· **둘째, 민간 사업 지원국:**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